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는 저작권법이 돼야

1957년 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선진국의 개정 압력을 받아왔다. 이후 저작권법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콘텐츠의 생산·유통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DC의 복제 용이성에 대응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등 저작자 계층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더욱이 지난해 말 발의된 저작권개정안은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나 이용자 사이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에 전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음악파일에 DRM을 걸어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애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독점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온라인 저작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작년 8월 온라인음악 서비스 맥스MP3가 SK텔레콤의 MP3폰에서도 자체 음악서비스 사이트 <멜론> 이외에 다른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폐쇄적 DRM을 개방하라고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이 있었다.

콘텐츠 수출국과 콘텐츠 수입국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다. 미국과 같은 수출국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입국은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선진 각국들은 저작권법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DC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의 주체는 저작자, 이용자, 디지털 저작물 서비스 사업자로 분리되어 있고, 계층 내 갈등도 만만치 않다. 현재 갈등의 근본 구도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구조와 유사하다. 아날로그 시대의 전형을 벗어나지 못해 굴뚝 산업의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듯 하다. 인식의 수준이 변화하는 환경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DC 상품을 아날로그 경제 논리에 맞출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의 근본 사상인 공유라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각 이해 계층의 디지털 눈높이 차이도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저작자, 이용자, 서비스 사업자간의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는 민원 해소용 정책이나 법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저작권과 관련된 DC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장의 규모를 늘리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단체인 전자프런티어 재단은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몰래 침투시켜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 이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음반사 소니BMG를 고소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소속인 릭 바우처 하원의원은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 권리법'을 발의해 CD와 전자책 등에서 판매자가 설치한 복제 방지 장치를 파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미국에서 저작물의 이용권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저작권은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권리다.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는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무는 꼴이며, 방만한 보호는 천적의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형국이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 모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야기된 저작자, 이용자 그리고 사업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익 차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저작권을 둘러싼 각 이해 계층이 대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조금씩 사회에 양보하고 공유해야 할 때다.

편집장 이창한